

광주·전남 6·13 격전지 - (7) 광양시장

# 김재무-정현복 리턴매치 ‘혈투’

### 미래당·무소속 후보 “지역발전” 역설 정책선거 실종...극에 달한 ‘네거티브’ 외지인·30~40대 젊은 층 향배 주목

4년 전에 이어 ‘리턴매치’가 펼쳐지고 있는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무소속 정현복 후보간의 치열한 혈투가 전개되고 있는 전남지역 최대 관심 선거구다.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양측 모두 십사리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조적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광양시는 영·호남이 어우러지는 지점에 위치한 데다 광양제철로 인해 외지인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30~40대의 젊은 유권자 비중 또한 높은 곳이다. 그 동안 선거에서 보수정당 지지표가 10%정도 나오고 있고, 진보정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선 되기도 하는 등 변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는 무소속 정현복 후보가 36.5%를 득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재무 후보는 30.5%에 그치며 6%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민선 5기 이상승 시장에 이어 8년간 무소속에 내뒀던 광양시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기로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와 무소속 이옥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정책선거보다는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김재무 후보 선거대책위는 최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현복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무 후보측은 예산 1조원 달성에 관련해 예산증가율과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절감 액수 등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당초 선거 초반 무소속 정현복 후보가 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인기로 힘입어 김재무 후보가 빠르게 추격하며 혼전양상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복 후보는 지지율이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역전은 있을 수 없다고 지역민들의 선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반해 김재무 후보는 선거전 준비부터 이미 지지율이 역전됐고, 선거일이 되면 오차범위를 넘어서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일찌감치 단수추천으로 후보를 확정짓고 4년 전 패배를 교훈으로 이번에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그는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중앙과 지방을 넘나드는 탄탄한 인맥이 장점이다.

김 후보는 오직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고 검증된 행정능력, 경제를 알고 경영할 능력, 광양에도 집권여당과 함께 할 대표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광양지역 현안인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재정기여를 통한 정상화 추진방안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사립대 전환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12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살피는 ‘버스 타고 시민 속으로’ 등의 민심투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다변화의 일환으로 광양해양클러스터 완성, 광양항권부두, 세풍산단, 화학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시민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그대로 소통이 됐고 목소리를 받아쓰니 그대로 정책이 됐다”면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써 화합과 긍정의 광양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정현복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 부군수와 전남도청 공보관, 예산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과 조직력이 강점이다. 특히 예산확보의 달인이고 추진력과 청렴성을 인정받아 시장의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정 후보는 빛의 도시 광양을 천혜의 자연자원인 백운산과 섬진강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관광 도시로서의 도약기를 마련했으며,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다.

정 후보는 취임 당시 6,000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매년 1,000억원씩 증액해 인구 15만 광양시 예산이 1조원대를 들



김재무



김현옥



정현복



이옥재

파했고, 재임기간 동안 부채를 조기 상환한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지지층이 여성이라는 판단 아래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공약으로는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중마·금호권역 해변공원 조성, 섬진강권역 뱃길복원 및 마리나항 조성, 청년수당 지급, 구직청년 교통카드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재선출마 선언을 통해 “15만 광양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달인 예산전문가로서 추진력있는 깨끗한 정현복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미래당 김현옥 후보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문화·역사를 토대로 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격적인 외자유치로 백운산 기슭에 화장품 제조공장, 노동환경위원회 설치, 좋은 일꾼 만들기 운동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초·중·고·대학시설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자신이 누구보다 지도력·추진력·순발력·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자평하고 있다.

40여년간 발명가로 활동해오고 있는 무소속 이옥재 후보는 특허등록만 20여건에 달한다. 모든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위대한 광양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라도 5개 시·군과 경상도 5개 시·군을 합한 동서대통합 정전특별도 건설 추진, 광양제철소 연계 연간 200만 대 생산 자동차공장 건립, 경비행기 제조·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강병운 기자



## 6·13 지방선거 레이다 D-2



### 이용섭 “한반도 평화로 민주열사 뜻 계승”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10일 6·10민주항쟁 31주기를 맞아 “5·18민주화운동에서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6·10은 민주항쟁사의 정점으로 국민이 승리한 역사”라며 “희생되신 민주영령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추모했다.

이 후보는 또 “독재타도를 외치며 쓰러진 광주 아들의 아들 박종철 열사, 고문으로 쓰러져 간 부산의 아들 박종철 열사, 그리고 6·10항쟁을 이끈 수많은 열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대한민국의 굳건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독재타도를 외치며 쓰러진 광주 아들의 아들 박종철 열사, 고문으로 쓰러져 간 부산의 아들 박종철 열사, 그리고 6·10항쟁을 이끈 수많은 열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대한민국의 굳건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덕영 “청년 창업기술특구 조성 일자리 창출”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10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기술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산업단지는 부지를 사야 운영이 가능하나, 청년이 입주할 경우 특례를 통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면서 “청년 창업기술 특구에서는 서류등록, 법, 금융지원 등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청년 재도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재창업과 재취업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또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광주역 구내 유휴공간을 ‘청년 스타트업 양성’, ‘청년 창업놀이터조성’, ‘청년상인 임대공간’으로 운영하는 ‘청년타운 조성’ 공약도 제시했다.

/조기철 기자



### 김영록 “‘근로·노동이 당연한 전남’ 실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0일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등 ‘근로와 노동이 당연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동·서부 권역별로 설치돼 있는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를 ‘전남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근로자 밀집 지역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취약 근로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등을 맡아 수행한다.

또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전남에 필요한 근로 및 노동정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박매호, ‘지역격차 해소·균형발전’ 공약 발표

박매호 바른미래당 전남지사 후보는 10일 전남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가파리나 낙후된 전남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농어촌과 도시로 나뉘어져 대립하면서 지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 22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권역별, 시·군별 장점을 살리는 특성화 전략으로 상생 발전시켜야 한다”며 “도지사과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

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체를 정례화해 지역발전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또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서부권 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며 “동부권은 우주항공, 신소재, 정밀화학, 신금융, 기능형 물류산업 및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광양의 철강과 여주의 석유화학 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 이정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국제학교 설립”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10일 “예향광주의 명성을 되찾고 문예제가 활성화된 예향광주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ACC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였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타지의 학생들조차 꿈을 위해 광주를

찾아오게끔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ACC국제학교를 만들어 광주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비롯, 북한 학생과 문화예술 교류, 청소년 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학생들도 광주 ACC국제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최영태 “광주형 민주주의·평화교육 모델 만들겠다”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6·10항쟁 3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평화교육’의 새 모델을 광주가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교육 비중을 높이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이를 키우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교육단체인 피스모모가 전국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낸 평화교육 제안에 공감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학생부터 교육감까지 광주 교육공동체 전체의 평화·민주주의 역량을 키우겠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평화역량이 자연스럽게 커지도록 하고, 학생 중심교육, 학교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함께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의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고석규 “실천 가능한 공약 내놓아야”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일부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터무니없는 거짓공약을 발표,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고 후보 선대본은 “전남 동부지역 모 인터넷 커뮤니티가 전남도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제안서 답변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선거 막판 네거티브와 거짓공약이 난무해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

를 표시했다.

고 후보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 등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세먼지 알라미 신호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할 계획이다”며 “이밖에 강당이 없는 학교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실내 체육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지방선거 이후 군공항 이전 급물살?

### 시장·지사 후보들 ‘적극’...후보지 주민동의 관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지방선거 후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장·전남지사 유력 후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취임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결정을 계기로 이전논의가 활기를 띠는 분위기지만 5조7,000억원의 사업비와 이전부지가 걸림돌이다.

광주공항은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이전작업이 추진돼 왔으나 아직까지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군공항 이전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후보 지역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작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안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주민설명회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3일 앞두고 당선 유력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가 군공항 이전문제에 적극 나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시·전남도 협의를 토대로 정부지원 받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공항 이전부지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광주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획기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전남지사 유력후보의 입장은 신중하

모습이다.

김영록 후보는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간 협의와 이전예정지역 주민의견이 중요한 만큼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과 투표를 거친다면 군공항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문제는 국방부 정책과제이기도 해서 선거가 끝나면 양시·도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중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양어’ 방식의 사업이다.

/조기철 기자